

국토부·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추가 매입

27일부터 신청...3개월 내 준공 예정아파트도 포함 GGM 모델 전국 확산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활용

노동자 주거 지원과 지방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을 공고했다. 이번 매입 물량은 5000가구로, 총 3000가구를 사들였던 1. 2차 공고 때보다 대폭 늘었다.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받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받았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심의에서 매입 신청 단지의 전체 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부터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편의성에도 신경을 썼는데, 중

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했다. 이어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0㎡ 이상 85㎡이하와 단지별 최소 20호 이상의 규모, LH 산정 가격 이하 매도회망가격 등 나머지 사항은 지난 2차 공고와 같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지방 미분양 아

파트 매입 사업을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LH는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의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급해주도록 공급하는 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 대상으로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 나갈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gwangnam.c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지난 10일 광주 공공배달업 활성화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상인회 공동 참여·배달료 지원 확대 등 필요”

광주경제일자리재단, 공공배달업 활성화 간담회

광주 공공배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광주 공공배달업 활성화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맹점주, 유관기관 관계자(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광주형프랜차이즈산업 광주전남협회, 북구 양산동 상인회), 배달업 운영사(신한은행, 슈퍼커넥트), 영업대행사

및 라이더(바르고, 모이콜)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배달업 부담, 낮은 이윤율, 현장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라이더 수익 감소와 배달대행사 운영 악화로 인해 배달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공

공배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확대, 실질적인 홍보 강화, 배달업 편의성(UI·UX) 개선, 입점 및 메뉴 등록 프로세스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공배달업은 중개수수료가 2% 수준으로, 민간 배달업 대비 낮은 비용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위메프오(슈퍼커넥트)'와 '땡겨우(신한은행)'가 운영 중이다. 공공배달업 이용 시 주말 할인, 주중 할인, 특별 할인, 배달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광주시, 대기측정업체 굴뚝먼지 검사역량 평가

9곳 대상...부적합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대기 측정대행업체 9곳을 대상으로 '대기분야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대기오염 물질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사업장 굴뚝에서 이뤄지는 시료 채취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실제 배출사업장 굴뚝에서 진행되며 △안전점검 △장비점검 △누출확인시험 △사전측정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합',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1회에 한해 재평가 기회가 주어지며, 재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세행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역량과 데이터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광주지역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국노동연구원, 2010~2024 임금 추적

임금 격차, 세대 싸움 아닌 '세대 안 싸움'

청년층 임금은 초임 설정·직무배치로 결정

한국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임금 격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40대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청년은 기회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는 예상 밖의 진단을 내렸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20·30·40·50대 임금노동자의 임금분포를 추적한 결과, 전체 임금불평등에서 연령대 간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차 7~9%에 불과했다. 나머지 91~93%는 각 연령대 내부에서 발생했다. 같은 40대라도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편차가 40대 전체와 20대 전체의 평균 차이를 압도한다는 의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연령대별 임금 격차 연구'(안근원, 이수련)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불평등은 공통적으로 완화됐다. 2017~2019년 사이 P90/P10(상·하위 10% 임금 비율), 지니계수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집중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연구진은 CES 생산함수 기반 구조모형으로 고령화의 간접 효과도 점검했다. 고령 노동자의 은퇴가 늦어질수록 관리직 자리가 누적 축적되고, 신규 일반직(주로 청년)의 승진 확률이 낮아진다. 모형에서 은퇴율이 5%에서 3%로 낮아지면 청년층 관리직 비중은 58.8%에서 42.7%로 떨어지고, 연령대 간 임금 격차도 벌어진다. 정년연장이나 고령자 고용 안정 정책이 청년 임금 성장 경로에 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한 것이다. 연구진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 정책은 초기 배치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 소득 보전보다 초임 설정·직무 배치·직무 간 임금 격차라는 제도적 설계가 핵심이다. 둘째, 중장년 내부 이직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40·50대 내 고임금층과 저임금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력 후반 재설계, 호봉제·임금피크제 개편이 시급하다. 셋째, 연령중립적 인사시스템을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직무급 확대, 경력 후반 재배치 설계, 연령중립적 인사시스템 구축은 세대 내 이질성을 줄이고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근본 처방이다. 연구는 결론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연령대 간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만 도적 장치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상값은 30대. 20대 가정 눈에 띄는 이상값은 30대. 20대 자체의 구조적 상황 이동이었지만, 30대

“자율성 훼손·정부 산하기관 전략 우려”

농협법 개정 비상대책위 “현장 의견 반영한 개혁을”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중심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 시행에는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민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제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직선제 도입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중심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보완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제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기준금리 7연속 동결...중동전에 물가·성장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2월 말 시작된 이란전쟁의 여파로 환율, 물가, 성장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동결 후 관망'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 발발 후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

경)까지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도 반감될 위험이 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킥을 완화했고 최근 1520원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금통위가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더 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키워 물가·환율 불안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선제적 물가 관리를 명분으로 당장 금리를 올리면 전장으로 위축된 경기가 더 타격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추

연합수